전북특자도 특별법 '생명서비스 산업화 특례'

고령친화 산업 선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농생명산업분야 특례와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특례에 이어 이번에는 주민 삶의 질과 연관이 제일 높은 '생명서비스의 산업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래산업 기초 고령친화 · 사회서비스산단 조성
도지사가 지역 특수성 반영 종합계획 수립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생명서비스 산업화 특례는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 및 국가지원의 미래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 내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고시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과 재단의 설립 및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42조~제47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제4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지를 선정하고 복합단지로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필요시 복합단지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고령친화산업 등 미래산업에 기초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전북의 노령화지수도 오는 2025년 265.0%에서 2050년 605.5%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개발은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례 중 하나이다.

또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연구 및 해외시장 판로지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민의 특수성과 목적이 반영되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도지사가 각 장관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제44조)을 특례에 담았다.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제45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육연수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제46조)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47조)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 기관 등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 인구소멸 대응에 기여하자는 특례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특례들이 통과하는데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고령친화 및 사회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등 생명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 중 전북의 미래산업인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친환경 모빌리티선도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 특례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정기 말살 안돼"… 계속되는 릴레이 단식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사진 오른쪽)과 임승식 의원이 11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할 것"

오늘 의총서 당론발의… "진상규명의 시작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별개로 특검을 통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일(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면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단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며 여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장관 직무가 정지돼 개각에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해임을 빨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연대할 당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다"며 야권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의안심의가 진행되며,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진행된다. 이어 15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민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군민과 함께 올바른 정책대안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자치행정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과 위원들은 집행부의 올해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했다.

김정현 위원장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강인식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희망 법률을 확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손중열 위원은 예루원과 예촌, 광한루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광한루원 담장을 낮추는 것을 요청했다.

오동환 위원은 아이맘누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미선 위원은 경영실적 평가 기관 선정에 대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자도 브랜드위원 위촉 1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위촉식 및 1차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근거 마련

강동화 도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조례 개정안 발의
아파트 내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 주민 스스로 결정 가능
화재 진압 어려운 지하주차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최근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충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북도의 관련 조례상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 관련 화재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화재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문건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1일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문건위는 1984년 지정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8호 '진묵대사 부도(浮屠)'가 위치한 완주 봉서사를 먼저 방문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및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한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완주군 신도시인 삼봉지구 중앙공원내 들어설 '고운삼봉도서관' 건립 부지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김재훈 기자